

경사노위 참여 안 된다 노동개악 문재인은 친구 아니다

물론 황교안은 적이다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3면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2, 3면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12면

알제리 항쟁으로
20년 독재 퇴진!
'아랍의 봄'이 다시 올까?

6~7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압박
강화 중단하라

7면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8면

낙태죄 위헌 심판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9면



민주노총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때 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조건도 지킬 수 있다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이정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된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 참가론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봤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재편했으니 과거처럼 정부 정책을 일방 강요하는 기구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가 강요된 합의 기구가 아닌 협의를 중시하는 기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위원 절반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한 구조라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근거였다.

이런 주장은 불과 몇 개월의 검증도 버티지 못했다.

문재인은 “노동 존중” 정책을 표방하고도 뚝만 들이다 하나씩 거둬들이더니 결국 노동개약에 박차를 가했다. 최저임금 줬다 뺐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 정책, 실효성 없는 노동시간 단축, ILO협약 비준과 노동권 보장 미이행으로 변죽만 울리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조법 개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지지자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노정관계는 협력에서 대립”으로 바뀌었는데 그 근본원인은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 후퇴”에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사노위 “1호 합의”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은 여지없이 시한을 정한 채 합의를 강요한 결과물이었다. 한 공익위원조차 이 합의가 일종의 밀실 합의였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반면 경사노위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사회양극화 해소’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하위 50퍼센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 지급) 합의는 부분적 개선 내용을 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편?

결국 기층의 압력을 받고 청년·여성·비정규 계층별 3인 위원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 반대해 불참하면서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은 무산됐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주문했다. 경사노위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답정너’ 기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현재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개악 합의를 막는 “안전 장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도 드러난 셈이다.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불참해 탄력근로제 개악의 분위원회 의결이 불발되자, 그들은 “보조축”일 뿐이라며 무시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민주노총 참가를 압박하고 경사노위를 포장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의사도 없는 것이다.

결국 현실에서 “지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된 것이 옳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좌파들은 공포해 경사노위 참여 말고 투쟁을 조직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좌절시키는 데에는 기여했다.

선진 노동자들은 좀 더 일찍부터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 시작했으나 더 광범한 노동자들은 최근 경사노위가 노동개약 추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드러난 경사노위의 모습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된 것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1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부결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노동운동 안팎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경사노위 파행 원인을 잘 분석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편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사정위와는 다르다면 경사노위가 마찬가지로 결과를 낸 것을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조를 바꾼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체결된 국내외 사회적 합의가 예외 없이 노동계급의 조건 악화로 끝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경사노위를 손바서 다시 활용해 보자는 것은, 본색이 드러나 위상이 실추된 경사노위에 새 숨을 불어넣자는 것에 불과하다. 개악 기구를 소생시키자는 것이니, 단결을 해치고 갈등을 키울 뿐이다.

지역이나 업종,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대화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최근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란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결국 반값 일자리로 귀결됐다. 카풀-택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도출된 택시월급제 합의는 국회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

투쟁 실력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운동이 개악을 막을 투쟁 실력이 없으니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했지만 노동개약은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한다고 정부가 노동개약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 들어간다고 개약이 멈출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지금 입증된 게 경사노위 참가 주장의 세가 약해진 이유 아닌가.

따라서 경사노위 불참 결정과 함께 예고된 노동개약을 막기 위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진지하게 투쟁 조직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1월 하순 민주노총 대대 이후 결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 달 가까이를 까먹었다. 그 사이 안타깝게도 노동개약은 성큼 목전에 다가왔다.

민주노총이 싸울 힘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약 반대 투쟁과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벌였던 2016년부터 성장세에 들어서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급증한 노동자 시위와 파업 건수는 노동운동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조 지도자들이 이런 잠재력을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선다면 개악 저지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저항에 나설 때 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조건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구현하려면 좌파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자기 노조 사안이 아니면 무관심한 부문주의나 정당과 선거를 통해서만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노조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기 벌어지는 투쟁들을 연결시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일반화된 투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투사들은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와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혁명적 정치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강동훈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들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4월 1일 경제부총리 홍남기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말이다.

4월 3일 재보궐 선거와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노동개악 처리가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총은 개악 법안 처리 지연이 “투쟁의 결과”이고 “승리”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도 지적하듯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악 추진을 이용해 더한층의 개악안 통과를 고수하면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4월 임시국회에서 개악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3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만간 노동개악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늘려 더 개악하고, 최저임금도 결정체계 개악뿐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개악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여기에 더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개



사진 출처: 김석우

실질적으로 조합원을 동원하는 위력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당의 이런 공격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를 파고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등을 표방하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등을 추진했지만, 곧바로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재개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며 개혁을 무효화했다. 자신들이 애써 만든 경사노위의 처리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말이다.

그러자 나경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뿐 아니라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이 함께 논의돼야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을 함께 처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인 노사정 합의안보다 후퇴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한국당이 최저임금에서 양보하는 대신 탄력근로제는 더 개악해야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조선·건설·IT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에 따라 초과근무가 물리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두는 방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법 개악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악도 이와 비슷하게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것보다 더 개악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방어권’ 강화를 동시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왔다. 사용자들은 이 기회에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자신들의 숙원 과제들을 함께 처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그를 대변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가 사용자들의 요구 중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만 받아들여 하자, 사용자들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부해 버렸다. 결국 한국당이 더 공세를 펼 것을 고려하면, 노조법 개악 문제도 경사노위에서 논의된

것보다 더 개악된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더 후퇴한 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비판이다. 그는 이런 개악안들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무효화되는 것을 넘어 노동개악 정부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4월 국회의로의 개악 법안 처리 연기는 더한층의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조합원 대중을 실질적으로 동원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국회 투쟁으로 투지는 보여 줬지만,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주요 노조들의 현재 대응 수준은 저들의 노동개악 의지와 비교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아직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는 투쟁을 조직하지는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이 민주노총의 주축 조합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서 인 듯하다. 그러나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는 결국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이제 비정규직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개악은 공장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경사노위에 미련을 거두고 노동개악에 맞서 제대로 대규모 투쟁에 나서야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실행일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까?

양효영

경사노위가 신뢰를 잃으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 기구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해악적이다. 두 달간 경사노위의 행보를 보면 무망하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산하 위원회에서 합의했다.

특히나 탄력근로제 시행 세부사항(임금 보전 방안, 휴식시간 보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곳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70퍼센트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충실한 협의”를 약속했지만 실상 정부가 시한을 정해 놓고 개악 합의를 압박하는 노사정위가 재탄생했다. 특히나 정부

나 국회가 나서기 부담스러운 사안을 경사노위에 떠넘겨서 합의해 오라고 했다.

그리고 이 합의의 틀리기로 계층별 노동위원들을 이용하려 했다.

계층별 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빠르게 경사노위에서 합의해 가져와라’ 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대화의 스텝이 꼬이게 됐다.”

애초에 정부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내는 데 진지하지 않았다. 계층별 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확대안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며 두 차례 불참하자,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비정규직, 여성, 청년 대표는 “보조축”이라며 깎아내린 것은 이런 인식을 드러낸다.

또 다른 계층별 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의 주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사노위 상황을 보여 준다.

“사회적 대화는 허울이고 실제 들어가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청와대와 노동부가 배후에서 조율하는 3자가

결정하는 이런 구조이고, 계층별 대표들은 정말 두려려였던 것이다.”

이 말은 경사노위가 계급 이해관계의 타협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있는 쪽의 입장이 강요될 뿐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이남신 씨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수준의 사회적 대화”만을 추구할 수 없고 “내부자로서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며 경사노위에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경사노위 상임위원들은 계층별 대표들의 대표성까지 문제삼고 있다. 계층별 대표들이 구색을 맞춰 줄 때는 이들이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한다’며 인정하다가, 이에 저항하자 대표성 없다는 식인 것이다.

이는 경사노위 안에서 계층별 대표들이 개악 둘러리인 한에서만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미조직 노동자들 처지를 미약하게나마 개선하는 제도들을 합의하더라도, “태타협”을 내세우며 더 큰 개악에서 둘러리 설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경사노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

주노총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개악을 막아 내는 투쟁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도 방어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흡족하게 방어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명분은 여러 번 얘기해 왔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천이 충분히 뒷받침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도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우리 문제는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파업과 같은 강력한 투쟁 계획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도 한 사례다. 개악이 통과돼도 조직된 부문은 단협 등으로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문주의적 시각으로 당장 조합원에게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개악을 진지하게 막아 내지 않으면, 미조직 노동자들의 불신과 불만을 더욱 키울 뿐이다.

이런 부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안에서 칸막이를 넘어서는 혁명적 정치를 가진 활동가들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을 이끌려 애써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창원성산 보궐 선거 결과

★ 여야 부패 공방전, 어떻게 볼 것인가

★ 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 면죄부 수사 될까

★ 세월호 참사 5년, 문재인 정부 3년: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 [인터뷰] 정리하고 투쟁 중인 성진 씨에스 정영희 분회장

★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 현대차

★ 비리 의혹 KT 황창규 사장 퇴진하라

★ 남양주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 철회하라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4월 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을 규탄하며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하고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전환 시기가 한참 넘었는데도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정규직화 제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기만이 됐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안 되고 있습니다.”(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비정규직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자기가 한 약속 안 지키고 있습니다. 권고안이라는 종이 쪽지 하나 내려보냈을 뿐입니다. 전남대병원장은 그게 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정해선 보건의

료노조 부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겪은 마음 고생을 털어놓으며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2017년 7월 20일 대통령이 얘기할 때 저도 TV 앞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만나기만 하면 대통령 욕, 정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잘 되겠습니까?”(박일순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민들레분회장)

“정규직화 제로를 외친 2017년, 2018년을 넘어 이제 2019년 4월입니

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에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

“정규직 전환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모든 정규직 전환에서 직무급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표준임금제가 그런 직무급제입니다. 직접 고용되고 차별은 계속 받는다면 그게 무슨 정규직화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소원석 민주연합노조 전북대병원지부장)

소원석 지부장은 얼마 전 단호한 점

거 파업으로 승리한 서울대학교 시설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직무급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은 직무급제에 반대하며 싸워 20.6퍼센트 임금 인상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정규직화,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위해 같이 투쟁합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부터 교육부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세 노동조합은 4월 20일 청와대 앞 공동 집회를 여는 등 공동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희망 고문을 끝내라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장호중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

“우리는 자회사는 못 받아들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돈벌이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회사는 못 받아들입니다. 12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청소 노동자도 정규직이었는데 이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해요.

병실에 들어갈 때 전염되는 환자가 있는지, 무슨 병인지 물어 보거든요. 우리도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근데 병원 직원이 아니라고 못 알려 준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

는 이유로 전염병이든 뭐든 다 끌어안아야 하나’ 하고 따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도 안전할 수 없죠.

병원 환경이나 청결에 대해서는 우리만 한 사람들 없거든요. 청소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전문가들이에요. 서울대병원장은 산부인과 환자 잘 보겠죠.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매년 1등 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해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까지 다 함께 싸워서 올해 안에는 해결해야죠. 우리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문재인도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어린 조카들까지 다 데려가서 촛불 집회 하고 박근혜 탄핵시킨 게 이유 없이 한 게 아니잖아요. 희망을 갖고 뭔가를 좀 바꿔 보겠다고 한 건데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안겨 주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화가 났어요.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불이익만 주는데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옛날 하고 달라요.

2차 교섭이 끝났고요. 4월 5일에 3차 교섭이 예정돼 있어요. 4월부터는 피켓 시위로 재개할 예정이에요. 5월에는 천막을 치든지 해서 투쟁 수위를 높일 겁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

“국립대병원장들이 뭉쳐서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국에 4개가 있어요. 본원은 광주에 있고 화순에 화순 전남대병원, 빛고를 관절센터 전문병원, 치과병원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해서 파견용역직 전환 대상은 540명이예요.

차별이 정말 많아요. 기계관리실로 말하자면 400퍼센트 상여금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나서 다 깎아 버렸어요.

지금은 딱 최저임금만 받아요. 청소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조합을 쫓 유

지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상여금이라든지 복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최저임금이에요.

부려먹을 때는 데려가서 식구라고 하고 뭇일 생기면 남이다 해요. 휴게실 문제도 많고 샤워실도 못 쓰게 해요. 병원 내에서 조끼도 못 입고 다니게 하고요. 그래서 투쟁할 때도 병원 밖에 나가서 하라고 해요. 차별로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병원 측은 다른 국립대병원들보다 먼저 합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이에요. 먼저 하면 다른 국립대병원장들의 질타를 받을 거라는 거죠. ‘서울대병원이 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국립대병원장들이 단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기는 했죠.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비정규직 제도로 만들겠다고 하니 ‘아, 이제 됐다’ 하는 희망이 2017년에 확 꺾였어요. ‘언제쯤 [정규직이] 될까’ 하면서 기다렸죠. 2018년도 넘기니 이제 ‘예전

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실망이 있어요.

그래도 말을 그렇게 했으니 계속 요구해 보자는 사람도 있고요. 실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노조는 각 현장에서 아침 선전전을 벌일 거고요. 4월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도 할 거예요. 계속 미루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기층에 있는 기초 시설에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김승주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

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104만여 명 중 10만 6000여 명). 이 중 4000여 명은 생식독성 물질 중에서도 납 등 가장 위험한 1A 등급 물질을 다루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6만 7000여 명, 전자관·반도체 제

조업이 2만 8000여 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22.5퍼센트)이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여러 추정치를 계산해서, 생식독성 노출 집단에서 해마다 170명의 선천성 기형아가 태어나고 이 중 생식독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42명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마저도 최소치다. 보고서가 스스로 지적하듯, 생식독성 요인에는 유해 화학 물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방사선이나 고열 등 물리적 요인도 있고, 장시간 노동, 교대제, 서서 오래 일하기, 무거운 것 들기 등도 임신 능력 또는 임신 중인 노동자나 태아의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이런 요인들까지 종합하면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유산 비율이 2006년 18.7퍼센트에서 2015년 24.5퍼센트로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김영택 등, 2016). 선천성 기형아 출산은 2008~2014년 사이 67퍼센트가 늘었다(임종한 등, 2018). 선천성 기형아 출산과 연관 있는 미숙아 출산도 2007~2016년 사이 1.4배 증가했다(통계청, 2017).

이 중 작잖은 부분이 생식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생식독성, 노동 조건 때문일 수 있다.

▶ 5면으로 이어짐

4면에서 이어짐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 물질도 늘고 있는데, 현재 취급되는 4만여 종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700여 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물질은 200여 종뿐이다.

그런데도 지난 7년간 생식독성에 의한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한 여성 노동자는 고작 8명에 불과하다. 모두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이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노동자 15명 중 12명에게 유산 위험이 나타났고 실제로 이 중 5명이 유산했다.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 노동자들은 임신한 이후에도 하루 평균 9시간씩 일했고, 휴식 시간도 거의 없어서 10분 만에 “밥을 입에 쏘여 넣”고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녀야 했다.

제주의료원 노동자, 산재 투쟁 중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등 알약 수백 정을 매일 뺑는 과정에서 가루를 흡입한 것도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무도 그 약물이 임신과 태아에 해롭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집단 산재 인정 투쟁에 나선 8명 중 유산만 산재로 인정하고 자녀의 선천성 건강 손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당하게도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산재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그 태아나 자녀의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아이가 배 속에서 아파 죽으면 산재고, 살아서 태어나면 산재가 아니란 말이나” 하며 정당한 울분을 터트린다.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는 졌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노동자들은 2심 판결이 위험이라는 취지로 위헌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3.7퍼센트가 선천성 기형아 임신을 경험했고, 난임(27퍼센트), 조산 또는 유산(22.8퍼센트), 생리 불순(20.2퍼센트) 등 거의 대부분이 생식건강에서 문제를 겪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

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보건업에서 ‘생식독성’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 보지 못한 비율이 73퍼센트에 이른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아도 산재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47퍼센트) 산재 신청을 해도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서(20퍼센트)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김인아 등, 2016).

산부인과에 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운 일로 여겨 꺼리거나, 생식 건강 문제를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가까운 동료에게조차 숨기는 분위기 있다. 생리통이 극심해져 “기숙사 방을 데굴데굴 구르”는 일도 허다하지만 관리자로부터 업살 피운다는 눈치밥 먹기 십상이라 꺾참는다.

이처럼 그동안 숨겨진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이 승소한다면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삼성반도체 직업병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승리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 물질로 인해 생식 건강에 피해를 입는 남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범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이런 파급 효과 때문에 기업주와 정부는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을 기어코 막으려 하는 것이다. 악랄한 기업주들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몰래 눈물 짓는 시간만큼 이윤을 긁어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출산율을 걱정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운운하면서도, 여성의 몸을 갇아 먹고 있는 유해 물질 작업장과 기업주들을 방치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새해 최고 소망”이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임신한 노동자를 끔찍한 노동 환경에 몰아넣은 공공병원(제주의료원), 끈질긴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내버려둔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와 자녀들의 생명보다 기업주들의 이윤 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더는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가 아픈 것이 자기 탓이라 자책하게 만들지 말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문재인 정부는 생식독성 물질로 인한 2세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3월 25일 르노삼성 부분 파업 집회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생산성이 높기로 유명하다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정선영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파업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물량 수주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 때문에 “르노삼성도 곧 GM군산 공장 신세가 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3월 르노삼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것이다.

르노삼성의 수출 물량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 수출을 위해 닛산이 위탁한 ‘로그’다. 그런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2월 미국에서 로그 판매는 전년 대비 21.9퍼센트 줄었고, 올해 1분기 르노삼성이 생산한 로그 판매는 47.2퍼센트가 줄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때문에 중동으로 수출하던 QM6의 판매가 전년 대비 58.7퍼센트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르노삼성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얼마 전 닛산이 올해 르노삼성에서 생산할 로그 물량을 10만 대에서 6만 대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로그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다.

닛산도 지난해 순이익이 그 전해에 비해 45퍼센트나 줄었다. 그래서 닛산은 미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1700명 감원을 추진 중이고, 중국 생산량도 20퍼센트 축소할 계획이다. 영국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과 신모델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이처럼 닛산은 세계적 차원에서 수익성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르노삼성의 물량을 축소한 것이다. 미국 수출 감소 탓에 일본 규슈 공장의 가동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닛산은 르노삼성의 물량을 일본 공장으로 돌려 수익을 높이고 싶어 한다.

르노와 닛산의 갈등도 물량 축소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다. 르노와 닛산은 동맹 관계이지만 지난해 말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연합의 전(前) 회장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체포된 일

로 심각한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카를로스 곤은 부패 문제로 체포됐지만, 르노가 닛산을 합병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 측과 연계된) 닛산 측의 의도가 작용한 듯 보인다. 이는 자동차 시장의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등에 업은 기업들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이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이 고율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강도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공장을 살리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열심히 일해 왔을 뿐이다. 그 결과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르노삼성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012년 이후 1600명 공장에서 쫓아냈다. 그 전까지 57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4100명이 하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2년 5800만 원에서 2016년 2억 2000만 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는 66대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1분에 1.1대씩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1개 라인에서 7개 차종을 만드는 혼류 생산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숙련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생산성(착취율)이 높기로 유명하다.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하버리포트에서 2017년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전 세계 148곳 공장 중 8위, 르노그룹 내에서는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골병”이 들고 있다. 3월 21일에는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에 허리 통증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다. 노동자들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말한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뛰어 다니어야 겨우 해결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노동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희망퇴직하는 동료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은 45분밖에 안 된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높은 수준

이라고 하지만, 르노삼성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5퍼센트 수준으로 한국의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본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노조 측에 따르면 13년차 이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평균 연봉이 현대차의 85퍼센트 수준이라도 되는 것은 그야말로 뼈 빠지게 야근, 특근을 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 르노삼성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역대 최대인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대부분 배당에 사용했다. 르노가 주식의 80퍼센트 가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르노삼성의 수익금을 고스란히 챙겨 간 것이다. 르노는 2007~2017년 배당금으로만 6180억 원을 챙겨 갔다. 2000년 삼성차를 인수할 당시 인수금액 6150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돈이다.

그리고도 사측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긴다. 올해 물량이 줄어든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 사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800명을 외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섭에서도 사측은 직원 20퍼센트를 외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물량 압박하며 위기를 부추기고, 공장을 살리려면 고통을 받아들이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다. “저희가 수 년 동안 임금 줄이고, 노동 강도 높이고, 양보하고, 토요일 특근, 일요일 특근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7명 중에 11명이 산재나 병가를 낼 정도로 골병을 얻고,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입니다. 물량을 받기 위해서 또다시 양보하면 우리 스스로가 회사를 떠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에 90퍼센트 이상 찬성했던 거죠.”(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 정종훈 지회장)

최근 사측은 한국GM처럼 공장이 폐쇄되지 않으려면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GM노조는 대규모 희망퇴직과 휴직, 임금 삭감 등을 수용했지만, 사측은 공장 폐쇄를 단행했다. 국내의 여러 경험들을 봐도 거듭된 양보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 뿐,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굳건하게 투쟁과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이지만 정착 자신의 몸은 병드는지도 몰랐다

알제리 항쟁으로 20년 독재 퇴진! ‘아랍의 봄’이 다시 올까?

이집트 사회주의자

2월 말 알제리에서 장기 집권한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의 5선 연임 시도에 맞서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 공휴일인 매주 금요일마다 수십만 명이 알제리 수도 알제시(市) 거리를 가득 메우며 한 달 넘게 대중 항쟁을 벌였다. 3월 31일에 100만 시위로까지 커진 항쟁에 직면한 부테플리카는 결국 4월 2일(현지 시각) 4월 내 사임의 사를 밝혔다. 20년 장기 집권을 종식하고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1962년 이래 50년 넘게 알제리 정치를 지배한 집권 세력에 타격을 입힌 것이다. 부테플리카 퇴진은 개입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 프랑스 제국주의도 당황케 했다. 이제 알제리 노동자 대중은 한 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노동자 투쟁이 운동에서 주도적 힘을 발휘했다. 항공·항만 부문에서 시작된 노동자 파업은 섬유·운송 산업으로 번지더니 석유·천연가스 등 주요 산업 부문으로 확대됐다. 노동자들은 어용 노동조합 지도부를 거슬러 비공인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2011년 아랍 혁명(‘아랍의 봄’)의 유명한 구호였던 ‘민중은 정권 퇴진을 원한다’와 함께 ‘알제리의 부를 재분배하라’라는 구호가 파업 현장에 울려 퍼졌다. 알제리 항쟁은 수단·튀니지·모로코 등 북아프리카에서 최근 몇 달 들처럼 소규모 노동자 투쟁을 배경으로 분출한 것이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북아프리카를 휩쓰는 투쟁 물결을 분석하며 교훈을 짚어 본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추가한 것이다.

대중 운동의 새 물결이 몇 주째 알제리를 휩쓸고 있다. 수단에서도 3개월 동안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투쟁을 살펴보면, 정권이 처한 구조적인 정치·경제 문제 때문에 아래로부터 대

대중 혁명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랍의 독재·반혁명 세력은 2011~2013년 아랍을 휩쓴 ‘아랍의 봄’ 물결을 [물리적·적] 켜기 위해서만 애쓴 것이 아니었다. 혁명을 백하면 대중에 끄박한 미래만 있을 뿐이고 결국 [혁명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황량한 이데올로기적 전망을 강요하려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수단과 알제리에서 대중 [운동이 정치의 장에 귀환한 것은, 혁명이 아직도 대중의 정치적 선택지에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사실, 혁명이 아말로 개혁될 수 없는 정권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알제리 대통령 부테플리카는 군 장성과 대기업 사자들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자이고, 수단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는 파투성이 내전에 책임 있는 정권이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자다.

수단과 알제리에서 대중 항쟁이 분

중 저항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단과 알제리에서 분출한 대중 항쟁은 아랍 대중들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출한 지금, 모로코에서도 직능조합과 노동조합들이 동참한 강력한 시위가 분출하고 있다. 튀니지에서도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레바논에서도 삶의 조건이 악화하는 데 맞서 대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요르단에서도 2018년 6월 대중 운동이 벌어져 국왕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보다 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도 대규모 항쟁이 벌어졌다.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에서도 분노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지배자들의 상황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아랍 혁명은 패배에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혁명의 기억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훈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혁명이라는 용어가 아랍 독재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수단과 알제리에서 운동이 중요한 승리를 쟁취하면, 희망과 자신감의 물결이 아랍 전체를 휩쓸 것이다.

정치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정치로

수단과 알제리에서 항쟁이 분출한 데는 기성 언론들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수단에서는 알바시르 정권이 뺑 가격을 세 곱절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 항쟁이 분출하는 방아쇠가 됐다. 하지만 2018년 12월 19일에 항쟁이 시작된 이래, 대중의 분노는 눈깜짝할 새 정권 퇴진 요구로 발전했다.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빈곤만 낳은 살인마 알바시르 정권과 타협·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다. 대중은 요구했다, “잔말 말고 물러나라.”

수단과 알제리에서는 대중운동이 광범해졌기 때문에 [운동이 경제에서 정치로] 뻗을 비롯한 사회적 요구들로 변했다. 여기에 더해, 턱없이 비싼 [생필품] 가격과 만연한 빈곤·부패에 대한 항의 시



2011~2013년 아랍 혁명 이후 다시 시작된 북아프리카 대중 투쟁 물결 알제리 항쟁이 승리한다면 이는 알제리를 넘어 이집트 등지에서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위로 있다.(알제리인 뱃 중 하나가 빈곤선 이하에 산다.) 운동은 [사회적 요구들을 제기하면서도] “정권 퇴진”도 계속 요구했다.

알제리에서는 부테플리카 5선 출마 반대 구호가 신속하게 실업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회적 요구들로 변했다. 여기에 더해, 턱없이 비싼 [생필품] 가격과 만연한 빈곤·부패에 대한 항의 시

운동의 폭이 넓어져 경제·사회 영역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쟁이 촉발됐다. 독재자들에게는 가장 끄박한 상황이다.

수단과 알제리에서는 운동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투쟁의 정치적·경제적 전선을 온전히 통합하고 체제 자체를 뒤엎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다

위대한 대중 항쟁은 절대 하늘에서 폭 떨어지지 않는다. 정권에 맞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벌인 힘겨운 투쟁들이 결실을 맺는 것이다.

수단 대중은 알바시르 정부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2012년 6~7월에 정부의 가혹한 경제 정책에 맞서 수만 명이 들고 일어났다. 2013년 9월에 수도 수단 곳곳의 도시들로 시위가 번졌다. 알바시르 정부는 이 시위를 잔혹한 폭력으로 진압해 약 200명을 살해했다. 시위대와 파업 노동자들은 이번 항쟁이 분출하기 전에도 몇 년 동안 중요한 도전을 해 왔다.

알제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알제리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파업을 벌

인 역사가 있다. 그중에 2018년 정부의 임금 정책에 맞서 수많은 보건·교육 노동자들이 벌였던 파업들이 가장 중요했다.

그보다 사흘 전인 3월 19일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광산개발 기업 미네르바에 제재를 가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 수익이 급감한 데다 금융 제재까지 당하고 있어서 금을 판매해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해 왔다. 미국의 미네르바 제재는 이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나마 있던 자금줄을 틀어막아 숨통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제재 강화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이다. 유엔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언론(AFP)의 3월 28일자 보도를 보면, 현재 베네수엘라인 94퍼센트가 빈곤 상태고 60퍼센트는 극빈 상태다. 베네수엘라 내 대학 세 곳의 조사를 인용한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인 37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고, 5세 미만 아동 22퍼센트가 만성적 영양 부족 상태며, 30만 명이 의약품 부족으로 긴급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마두로 정부가 시행하는 배급제는 이런 상태를 개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계급의 구실이 결정적이다

수단인들이 벌이는 영웅적이고 끈질긴 항쟁의 핵심에는 노동조합 8곳의 연합체인 “수단직능인협회”가 있다. 바로 이들이 알바시르에 맞선 시위와 파업을 매일 같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알제리에서는 노동조합 일부가 부테플리카 정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정부에 맞선 항쟁이 커지는 데 대규모 거리 시위가 중요한 구실을 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그런 종류의 도전은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정부가 행진과 시위를 오랜 시간을 들여 계속 탄압할 위

출처 영국 빈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47호 / 번역 김준호

제재 확대 위협하며 베네수엘라를 더욱 압박하는 미국

김준호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정권 탈취 운동이 70일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파이도는 3월 11일 의회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곳곳을 돌며 “자유 작전”이라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한 달 새 두 번째인 3월 25일 정전 사태도 반정부 시위의 명분이 됐다. 지금 파이도는 국내 갈등을 심화해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한편, 미국 제국주의의 개입에 문을 열어주고 있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외 세력의 국내 진입이 불법이 아니게 된다.

파이도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파이도의 “자유 작전”은 곳곳에서 대항 시위에 부딪혔다. 파이도의 부인 파비아나 로살레스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 “파이도를 향해 날아오는 돌팔매”를 불평할 정도로 이런 맞불 시위들은 거세다.

미국은 파이도를 적극 후원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간섭과 압박을 나날이 더하고 있다. 3월 21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파이도의 측근 로베르토 마레로를 체포했다. 마레로는 콜롬비아 우익 무장 세력과 연계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자 미국은 바로 다음 날 베네수엘라 국영개발은행 반데스와 자회사 4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그보다 사흘 전인 3월 19일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광산개발 기업 미네르바에 제재를 가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 수익이 급감한 데다 금융 제재까지 당하고 있어서 금을 판매해 식량과 생필품을 수입해 왔다. 미국의 미네르바 제재는 이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나마 있던 자금줄을 틀어막아 숨통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제재 강화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이다. 유엔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언론(AFP)의 3월 28일자 보도를 보면, 현재 베네수엘라인 94퍼센트가 빈곤 상태고 60퍼센트는 극빈 상태다. 베네수엘라 내 대학 세 곳의 조사를 인용한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인 37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고, 5세 미만 아동 22퍼센트가 만성적 영양 부족 상태며, 30만 명이 의약품 부족으로 긴급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마두로 정부가 시행하는 배급제는 이런 상태를 개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봉쇄해 질식시키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군사 개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려 미국 제국주의의 국내 영향력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인 다수가 정권 탈취 세력으로 기울지 않는 데서 오는 초조함도 트럼프 정부가 군사 개입 카드를 거론하는 다른 이유인 듯하다.

“먼로 독트린”

3월 29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레트럼프 정부는 ‘먼로 독트린’이라는 말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1823년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유럽 국가들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을 반대하며 선언한 먼로 독트린은, 이후 라틴아메리카가 미국의 독점적 세력권임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표현이 됐다.

그 하루 전인 28일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정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해 베네수엘라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다른 항공사들도 베네수엘라 운항 항공편을 줄이고 있다.

3월 19일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의 군사 개입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글을 실었다. (무시무시하게도 이 글의 부제는 “[군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였다.) 이 글을 보면, 미국은 지상군을 15만 명 이상 투입해 베네수엘라를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최악의 경우… 전쟁 난민이 약 800만 명 발생할 것”이라고 점쳤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브라질의 ‘미니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트럼프와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3월 19일 보우소나루는 미국을 방문해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 직후 보우소나루는 칠레를 방문해 라틴아메리카 우파 정부들의 국제 포럼인 ‘남미 발전을 위한 포럼(PROSUR, 프로수르)’을 창

설했다. 프로수르는 창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과 제재 입장을 채택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트럼프 정부에 계속 어그정을 놓으며 제국주의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두 강대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문제를 두고 두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충돌했다. 3월 24일 러시아 육군참모총장 바실리 톨코시쿠로프가 군사 고문 100여 명을 이끌고 베네수엘라에 입국했다. 3월 29일에 한 러시아 국영방위산업체는 베네수엘라에 헬리콥터 조종 훈련소를 차렸다. 같은 날 중국도 베네수엘라에 의약품 등 물자를 대량 지원했다.

러시아는 2018년 12월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훈련 당시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Tu-160을 베네수엘라에 배치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비난하고 나섰다. 볼턴은 2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를 감행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일각에서는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유령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며 다소 과장스럽게 우려하고 있다.

한 편(미국)의 제국주의를 다른 편(러시아)의 제국주의로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는 더 큰 곤란을 낳을 뿐이다. 러시아·중국 등에 기대 미국의 압박을 피하려는 마두로의 셈법이 위험한 까닭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와 중국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자결권 때문이 아니라 자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두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열강의 갈등이 격화할수록 노동자 대중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느’ 처지가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싸우는 노동자 대중의 행동이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제국주의가 물고 은 불길한 구름이 베네수엘라를 휩쓸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운명과 미래는 베네수엘라 노동자 대중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곧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조셉 주나라 앤디 브라운 김준호 지음 | 책갈피 | 6,000원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좌파 정당이 떠오른다

루이스 닐슨

백악관에 사회주의자가 입성할 수 있을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예비 선거)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라 점치기에 매우 이르지만, 버니 샌더스가 재출마를 선언한 지금 그런 전망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샌더스 재출마 선언 6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샌더스 선거운동에 자원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다뤄 보자.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2016년 샌더스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선거운동이 가난하고 불평등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계급의 심각한 고통에 다가갔다는 점이다.

샌더스는 월가(街) 금융 엘리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전국민 단일의료체계 확립]’·‘그린 뉴딜’*·무상[고등]교육 등의 정책을 지지했다. 이를 통해 그런 [노동계급의] 분노에 공감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좌파적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 줬다. 샌더스 선거 운동은 힐러리 클린턴의 중도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반가운 도전이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샌더스와 견줄 수준이 전혀 못 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샌더스와 정치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지만, 그도 1995년까지 공화당원이었다. 워런이 초보적인 경제 규제를 하겠다는 매우 제한된 약속을 한 것 때문에 그가 좌파적이라고 알려진 듯하다.

정치적 양극화 흐름에 부응하면서 샌더스만큼 지지를 모을 믿을 만한 후보가 민주당 기성 정치인 중에는 없다. 샌더스는 출마 선언 24시간 만에 평균 약 25달러[약 2만 8000원]의 개인 소액 후원으로 약 400만 달러[약 45억 원]를 모았다. 기업 후원금을 받고도 샌더스와 비슷한 액수밖에 모으지 못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기성 정치인 후보들을 초라해 보이게 하는 성과다.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을 꺾지 못했다. 민주당 고위층의 치사한 술수를 탓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인들이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리 없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6년 샌더스 선거운동은 계급 문제에 침묵해야 한다는 미국 기성 정치권의 금기를 깼다.

공화·민주 양당은 부자 감세, 공공서비스 민영화, 주정부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에 수십 년 동안 뜻을 같이해 왔다.

Q 용어설명

‘그린 뉴딜’ 법안

정부 지출 확대를 기후변화 대응과 각종 공공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대규모 개혁 계획이 담긴 법안으로, 좌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발의했다.

샌더스는 이 때문에 나락에 떨어진 평범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대변하면서 지지를 모았다.

이제 몇몇 여론조사에서 샌더스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2016년 [대선 경선 전까지만 해도] 버몬트주(州)의 무명 상원의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이런 인기에는 순응과 타협의 압력이 뒤따르겠지만, [샌더스 열풍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공식 정치를 지배해 왔던 협소한 이분법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제 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입발린 소리로나마 보편적 아동 복지와 ‘그린 뉴딜’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균열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얼마 오르지 않았지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라시다 트레임 같은 좌파 인사들이 [민주당 후보로] 하원에 입성했다. 둘 모두 민주사회주의당(DSA) 소속이다.

이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민주사회주의당은 1982년부터 존재했지만, 오랫동안 수천 명짜리 소규모 서클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6월 클린턴이 경선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민주사회주의당 당원은 6500명 정도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민주사회주의당 당원 수는 5만 5000명을 넘었다. 놀랄 만한 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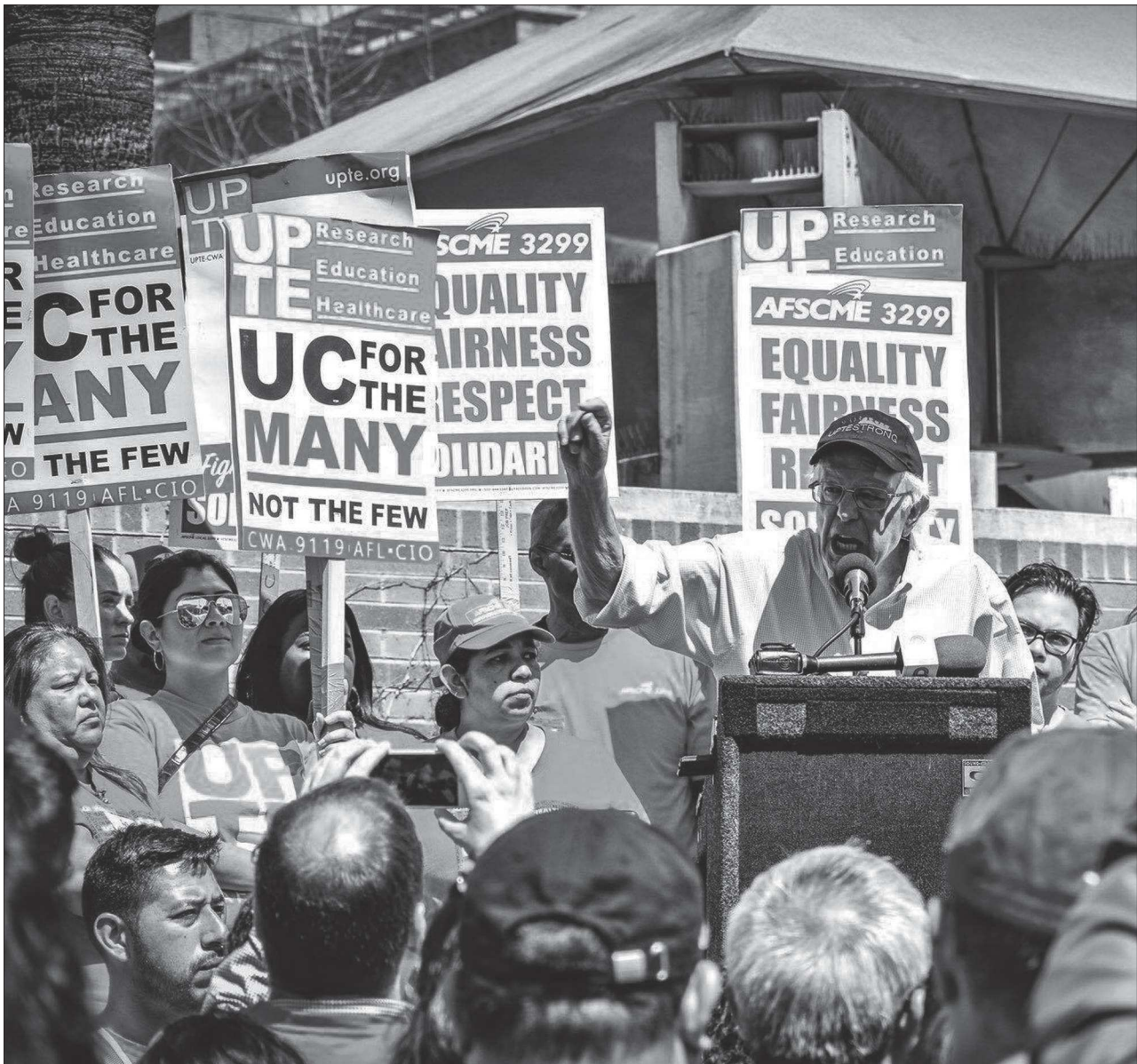
샌더스 선거운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미국 대통령 노벨트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이 결합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사회주의 정치와 조직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사회주의당의 중위 연령은 33세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음을 보여 주는 수치다. 민주사회주의당이 성장할 때와 같은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교사 파업, 연방 최저임금 15달러[약 1만 7000원]를 요구하는 투쟁, 인종차별과 극우에 맞선 투쟁 등 중요한 운동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미국 좌파 잡지 《자코뱅》이 최근 지적했다, 그런 운동들은 오랜만에 “자유주의 좌파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창출했다. 앞으로 그런 운동들이 어디로 나아갈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샌더스 열풍은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미국 정치의] 발전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려면 새로운 좌파들에게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민주당 자유주의자들과 손 잡는 것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미국 노동계급이 파업과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9년 3월호



“여러분들의 투쟁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의 일부입니다” UCLA 교직원 노동자 파업 집회에서 연설하는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강점과 약점

김준호

샌더스 선거운동은 ‘젊은’ 운동이다. 선거운동에 자원한 100만 명 중 약 40퍼센트가 이번엔 처음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다.

지지층도 젊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연구소(IOP)의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는 19~30세 청년층에서 2위 후보를 두 자리수 퍼센트포인트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공약은 청년 노동자들이 열광할 만한 광범한 사회개혁 과제와, 새롭게 부상한 운동들의 요구를 망라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임금 성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육아휴직 보장, 전국민 단일의료체계 확립, 이민 정책 대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

이런 요구들을 위로부터 개혁으로 성취하려 한다는 점에서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는 체제 변혁적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복유립적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그 정도의 대규모 사회 변화를 이루려면 노동자 대중의 아래로부터 투쟁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인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서 샌더스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적잖은 영감을 준다. 게다가 샌더스의 선거 운동은 노

동자 대중 운동들에 대한 지지를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샌더스는 2016년 경선 당시 통신 노동자 파업에 연대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려 했고, 이번에도 UCLA 교직원 노동자 파업 집회에 지지 방문해 연설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SNS를 통해 대중에 전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샌더스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줄곧 반대해 왔고, 3월 14일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예멘 전쟁 개입 중단 결의안이 통과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대항마?

미국 민주당 주류는 샌더스에 맞설 간판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 조셉 바이든이 대항마로 거론되는 까닭이다.

바이든은 민주당 6선 상원의원 출신으로 당내 주류 최고 거물 정치인이었다.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까지 역임하는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다. 그는 미국의 코소보 전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2003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으며, 아랍 혁명으로 쫓겨난 이집트의 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미국 민주당 주류의 일각은, 바이든이 오랫동안 민주당 의존적이었던 미국 노총 AFL-CIO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도 보는 듯하다.

그러나 바이든이 출마하더라도 뺏속까지 친자본·친제국주의 지배계급 인사인 그가 새로운 급진화 물결에 부응할 리 만무하다. 이미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부통령 시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미투’ 폭로가 두 건이나 나오기도 했다.

기득권층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상한 샌더스는,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번 경선 때 샌더스는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며 제국주의의 화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민주당 지도부 지지 수준에 그치기 보다는 민주사회주의 열풍의 진정한 동력인 급진화 흐름을 온전히 대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그린 뉴딜’ 법안이 상원 투표에 부쳐졌을 때 샌더스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을 따라 기권표를 던진 것은 잘못이었다. ‘그린 뉴딜’은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이자 민주당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출한 사회개혁 법안이었다.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민주사회주의당은 3월 22일에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 노동계급의 변화 열망이 표현된 샌더스 열풍에서 민주사회주의당과 그 안의 급진좌파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낙태죄 위헌 심판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진희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현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현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등 의료인들이 요청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죄 조항들은 7년 전인 2012년 4: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 뒤 낙태죄 폐지 여론은 성장해 왔다. 올해 2월 정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75.4퍼센트가 낙태죄 개정에 찬성했다. 3월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필요할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7퍼센트(남성 79퍼센트, 여성 75퍼센트)였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85퍼센트, 94퍼센트의 압도적 비율로 ‘필요시 낙태 허용’에 찬성했다.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낙태 금지법이 터무니없다고 여기고 있다. 낙태죄는 즉각 없어져야 한다.

낙태죄 폐지

한국에서 낙태로 실행 선고가 나오는 일은 드물지만, 낙태죄가 ‘사문화’된 것은 아니다.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남아 있는 한 여성과 의사는 언제든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낙태



▲ 비웨이브 주최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모낙페 등 주최 낙태죄 폐지 집회

단속도 강화될 수 있다. 낙태 반대 의사들이 2009년 말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했고, 지난해 말 남해 경찰서가 낙태 수술 여성을 색출하려 했다.

이런 일들은 여성뿐 아니라 의사도 위축시킨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정원(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은 낙태가 불법인 탓에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의

료인이 줄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임신중절시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5년 전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80퍼센트였다. 2009년에는 임신중절수술의 경험에 있는 의사 비율이 58.3퍼센트, 2010년에는 49.3퍼센트로 줄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병원에서 낙태

를 거부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낙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여성신문>이 7개 산부인과 병원을 조사했는데, 수술비가 임신 7주에 무려 80만~100만 원이었다. 임신 13주에는 100만~180만 원이었다.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약인 미프진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개발됐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 정부는 낙태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

낙태를 죄악시하며 여성의 몸과 삶

낙태죄 반대 운동은 대중 운동으로 성장해야

올해 2월 <경향신문>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면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낙태 허용 조건을 정해야 한다.

경향신문의 전망은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다는 점과 2012년의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물갈이 되면서 자유주의적 재판관들이 다수가 됐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위헌 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어쩌면 판결이 연기될지도 모른다. 현재는 매우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므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반영하지 않는다. 간통죄는 1988년을 시작으로 네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015년에야 폐지됐다.

지배자들은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생산가능 인력이 부족해져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지난해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언론 보도와 국회 보고서가 많다.

물론 낙태 문제에서 지배계급의 입장이 통일돼 있지는 않다. 지배계급 일부는 낙태 금지를 완화하기를 바란다.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초기 낙태를 허용하자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여가부도 낙태죄 폐지 입장을 현재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낙태를 일부 허용하자는 입장이 지배계급 다수의 견해는 아닌 듯하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법무부는 낙태죄 유지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불법낙태 시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을 지난해 발표했다(의사들의 반발 때문에 현재 판결 뒤로 시행을 유보했다).

특히, 현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위헌 입장은 아닌 듯하다. 셋만이 위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9명 중 6명이 위헌 입장이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낙태죄 심판의 주심인 조용호는 낙태죄 유지 입장이다.

따라서 낙태가 합법화되려면 낙태권 운동이 현재 판결에 좌우되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아래로부터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가 국민투표로 합법화된 것을 자유주의 언론

이나 여성운동 일각에서는 아일랜드 총리나 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으로 여긴다. 그렇지 않다. 아일랜드 낙태 합법화는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낙태권 운동이 최근 몇 년 간 대중 운동으로 성장한 덕분이었다. 기층에서 조직된 거리 시위가 수만 명 규모(한국으로 치면 수십만 명에 해당)로 몇 차례 일어났다. ‘이윤보다 인간을’ 소속의 사회주의자들이 대중 운동 건설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

올해 3월 9일과 30일, 비웨이브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페)이 주최한 집회가 각각 열렸다. 특히 비웨이브 시위는 젊은 여성 4천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이 운동이 등장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비웨이브 집회는 급진적이고 투쟁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 집회는 태아의 생명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성의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를 옹호한다. 문재인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한다.

약점도 있다. 남성 비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남성과 ‘운동권’ 배제 방침이 그것이다. 이는 낙태권 운동이 대중

운동으로 성장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비웨이브가 내건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라는 급진적인 요구를 성취하려면 운동의 규모가 수천 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 운동이 성장하게 되면 낙태 반대론자들의 반격도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투쟁성뿐 아니라 광범한 대중의 참가를 고무하는 게 필요하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여성과 남성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동계급의 쟁점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쟁점이다. 낙태 불법화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여성들이다.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금지됐어도 늘 낙태를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계급은 낙태죄 유지에 이해관계가 없다.

역사적으로 많은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며 운동에 동참해 왔다. 국민투표 승리로 올해부터 낙태가 부분 합법화된 아일랜드에서도 남녀 노동계급이 운동에 대거 참가했다.

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물론, 여성이 요청하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누구도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낙태권

낙태 수술과 약은 의료보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피임도 마찬가지로.

사유와 기간 제한, 상담 의무화 등의 제한 없이 여성의 낙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여성이 낙태하려는 사유를 제3자에게 해명하고 승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간 제한 역시 불필요하다. 해외 낙태권 운동의 구호처럼 ‘가능하면 조기에, 필요하다면 늦게라도’ 여성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은 의무가 아니라 여성의 선택 사항이 돼야 한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궤변과 달리, 태아는 결코 모체와 별개의 독립적 생명체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 주장이 잘못된 이유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살아 숨쉬는 여성의 삶보다 우선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낙태 금지론자들은 또다시 ‘생명 윤리’ 운운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미혼 여성에 대한 천대나 가난이다. 도덕적 설교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힘겹게 살아가거나 버려지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낙태 금지가 아니라 사회가 양육을 책임지는 게 절실하다.

특히,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는 바로 1917년 노동자 혁명으로 세워진 소비에트 러시아였다. 배우자나 의사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여성에게 낙태 사유를 해명하라는 조건도 없었다. 낙태 시술은 소비에트의 병원에서 하도록 법률에 명시됐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중 운동으로 낙태가 합법화돼도 이내 반격이 일어난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에서 낙태권 공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반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도 노동계급이 광범하게 동원돼야 한다. 1970년대 영국에서 보수당 정부가 합법 낙태를 축소하려 하자, 영국노총(TUC)이 최대 8만 명 규모의 대중 시위를 이끌어 저지한 경험이 있다. 이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들이 낙태권 공격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하고 운동에 앞장서도록 촉구하는 데서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

한국의 낙태권 운동은 이런 노동계급의 투쟁과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이창배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4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4월 13일 총궐기(서울)를 시작으로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수령자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이나, 전속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3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사용자로부터 온갖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부터도 배제돼 왔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2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9만 명의 8.2퍼센트에 달한다. (3월 25일 한국노동연구원 이 발간한 보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투쟁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투쟁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요구도 쟁취해 왔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들 모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사코 외면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을 강행처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배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하나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속성 개념은 이후 대다수



역주행 중인 문재인 노동3권은 어떤 조건도 없이 온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조치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만 두 개씩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전부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ILO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장) 비준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추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대감을 높이며, 조직화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노동조설립신고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약속 이행은커녕 오히려 역주행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ILO기본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향후 모색’한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놓았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ILO 협약 비준에 준하는 ‘사용자 대항권’도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등 하나같이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다.

약속 이행 대신 개악?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안이나 정부 정책은 노동3권 보장이 아닌 직종별 보호대책으로 가득이 잡히는 분위기다. 진작에 20대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상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한 노조법 개정안(2016년 이정미 대표발의, 2017년 한정애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한노위에서는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악안이 통과될 기세다. 제

작년엔 개선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는 개악의 선봉장이 돼 있다. 여권 전체의 기조가 노동 개악으로 분명히 틀렸기 때문이다. 그는 경사노위 ‘단결권 논의’를 반영한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해고자의 자격 및 활동을 제한하고,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자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도록 돼 있다. 이는 개별기업에 ‘전속’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에 장애가 된다.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문제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대상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전처럼 사용자 전속성을 잣대로 선별적인 적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새로운 분야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형성될 때마다 사업주들의 반발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을 것도 볼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

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자의 요청만 있어도 단체행동을 봉쇄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을 감안해 부여한 최소한의 권리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어떤 조건도 없이 온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팔을 묶은 채 사용자와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개악안은 폐기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4월 13일 총궐기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직종, 지역을 넘어 단결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려는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

4월 1일 청와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생생하게 현실을 증언했다.

“방과후교사들은 숨 쉬는 것도 차별을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아지면서 정규 교과 시간에 공기청정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과후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방과후 교사는 외부업체 소속이고 학교 책임이 아니니 학교에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의 구체적인 업무 지

시를 받고 요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장이나 보험이나 연료비, 유지비도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장 아니라는 것은 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대리운전노동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합니다. 업체나 정부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투쟁은 플랫폼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화물 고정 작업 중 떨어진 화물에 깔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을 시킨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파업을 벌이고 단체행동을 하면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하고 구속과 손배로 탄압했습니다.”

“저는 우버잇츠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입니다. 업체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고용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배달원들을 자릅니다. 제가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자 다음날 사측이 무기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장은 교통신호를 지키려 길을 돌아가는 라이터에게 신호를 다 지키면서 어떻게 배달을 하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라이터 노동조합을 출범하려고 합니다. 5월 1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

토바이 행진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화물연대처럼 싸워보고 싶으며 노조를 만들고 싸워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건설기계 등 특수고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는데 우리는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간 권리를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주차 노동자 작업공간 개선 요구

“매연과 습기 말고
햇빛 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양효영

지난 몇 달 동안 이화여대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작업공간(주차관리소 [사진1])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리소 곳곳에는 먼지와 검댕이 끼여있다.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두 대씩 돌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도 먼지를 막을 수가 없다. 한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생전 없던 비염이 생겼고 코 한 쪽이 항상 혈어 있어요”, “감기 한 번 걸리면 두 달씩 앓아요.”

끊임없는 환풍기 소리도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소음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려서 목 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아내가 ‘왜 싸우면서 전화를 하냐고 할 정도죠.’”

게다가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이 공간에서 업무를 본다. 휴게실도 없다.

학기 초에는 하루에 4000~5000명이 주차장에 들락거려서 사실상 문을 열어 놓고 근무한다. 그런 날은 점심도 먼지투성이 사무실에서 먹어야 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이런 상황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햇빛은 생체 리듬을 조화롭게 하고 꼭 필요한 비타민D도 합성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햇빛 부족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주차장 미세 먼지는 심장병과 중풍 같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속적인 소음은 더욱 해롭습니다. 청력 저하뿐 아니라 혈압과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죠.”

이런 열악한 조건을 <노동자 연대>가 폭로하고, 이어 <이대학보>도 보도하자, 학교 안전팀 관계자는 “아무리 환기를 한다고 해도 지하 공기가 지상에 비해 나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학교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간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첫째 장소는 ‘병커’라 불리는 창고인데 창문이 없어서 햇빛도 안 들고 습기가 차있다.

게다가 기존 사무실보다도 작다. 기존 사무실도 CCTV 등 때문에 노동자 10명이 비좁게 지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제대로 된 장소를 내놓긴커녕 노동자들더러 ‘병커’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부정적 이미지



[사진1] RXY



[사진2] RXY

매연이 싫다니까 폐가로 가라는 이대당국

사진1(위)이 현재 사무실, 사진2(아래)가 학교가 제시한 새 사무실, 곧 무너질 듯하다

가리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한 노동자는 황당해 하며 말했다. “우리가 보기엔 병커인데 그럼 뭐라고 하죠? 대피소?”

둘째 장소는 무너질 것 같은 폐건물 이대[사진2], 콘크리트도 부서져서 녹슨 철근이 다 드러나 있다. 천장에선 석회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빠를 것”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게 문제

학교 당국은 달리 공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신축 건물들을 지어 왔다. 관광객을 위한 고급 카페, 기념품 가게는 몇 개월 만에 똑딱 짓곤 했다. 대규모의 산학협력 관도 확대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부실한 수업 공간

(인문대 건물 천장 붕괴가 대표적)과 동아리방 부족으로, 노동자들은 열악한 휴게실과 작업공간으로 고통받았다.

공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노동자보다 관광객과 기업의 편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문제다.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학교 당국은 주차료를 쓸쓸하게 벌어들이고 있다. 학교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연 투성이 ‘병커’나 폐건물밖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하 주차장에 사무실이 있으면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여길 찾아올 때 늘 매연을 마셔야 해요. 학교가 교육의 전당이면 이런 점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여겨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처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박설

“대우조선, LNG 고부가가치선 한 척 수주”, “열흘 만에 2척 추가 수주”, “세계 최초의 쇠팅NLG선 4척 동시 인도”...

지난해 “수주 잔고 세계 1위”를 기록한 대우조선이 올해도 수주를 늘리고 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한때 5000퍼센트가 넘던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대로 낮췄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희생을 강요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2만여 개가 줄었고, 임금 삭감, 각종 복지 후퇴, 노동강도 강화 등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이런 구조조정 속에 피땀 흘려 가며 일한 결과, 자본 잠식 상태였던 대우조선은 흑자로 돌아섰다. 얼마 전 사퇴한 전임 사장이 ‘일손이 모자라 인력 감축을 못 하겠다’며 지난해 말 정부와 갈등을 빚었을 정도로 수주 잔량도 늘었다.

그런데 상황이 호전된 지금, 정부는 대우조선을 민간에 팔아넘겨 다시 노동자들을 불안정으로 내몰려 한다. 노동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 회사를 살려 놔더니, 다시 노동자들을 내치는 것이다.

거짓말

최근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회사의 일원인 근로자도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조선업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왈가왈부 말라’된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더구나 그저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만들어 낸 노동자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책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한다. 대우조선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매각이 고용 위협과 거리가 멀다고도 말한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도 “(현대중공업의) 유휴 인력을 대우조선으로 전환 배치 안 하겠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자들과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말들은 거짓 말투성이다.

고용 안정 약속의 이면에는 “경쟁력 제고”를 단서로 달았다. 인수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일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의 “동일 조건”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 대우조선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대규모 순환 휴직이나 분사·외주화 같은 공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이미



수주가 호전됐는데도 또 희생하라고? 3월 22일 상경 집회에서 행진 중인 대우조선 노동자들

조선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과잉 설비·인력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와 구조개편(M&A)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매각이 대우조선의 원하청 노동자, 연관 기자재 산업의 노동자 등 수많은 일자리,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대우조선 매각은 중소 기자재업체를 위협하는 문제이지,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고용과 단협을 승계할 수 있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틀린 진단인데다, 실질적 불안감을 느끼며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찬물 끼얹는 소리’로 들릴 법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대체로 ‘매각 반대’ 요구를 꺼리기도 한다.

정부 책임

금속노조 지도부의 일부는 매각 반대 요구가 “산업은행 (소유·관리)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그러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지지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은행 소유의 국유기업을 사기업에 팔아넘겨 일자리 보호의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다.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민간기업이야 이윤을 좇아 행동하더라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감도 크다.

더구나 정부 소유 기업을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 기업에 거의 공짜로 넘겨주겠다니, 정치적 명분도 없다.

노동운동은 이런 점을 심분 활용해 대우조선 매각 철회, 민영화 철회를 전면

에 걸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가 대우조선을 영구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 즉 영구 공기업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지금 대우조선처럼 향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임시 관리체제(일시 국유기업)와는 다른 것이다. ‘일시 국유기업’의 경영 목표는 민영화를 위한 “경영 정상화”이고,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정부는 대우조선을 영구 공기업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가 소유 기업이고, 정부는 지금까지 13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런 돈은 현대중공업에 헐값 특혜로 주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

정부는 자국민의 고용과 생존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더구나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고용 보장 책임을 져야 한다.

4월 3일 대우조선지회와 민주노총, 노동사회단체들이 ‘재벌 특혜 대우조

추천 소책자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박설·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박설·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28쪽, 1,000원

조선업 위기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외 지음



노동자연대

박설 외 지음, 노동자연대, 62쪽, 3,000원

선 매각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연대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전국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해 달라는 대우조선지회의 요청에 응답해 결성됐다. 그런 만큼 매각 저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연대를

모아 내려 애써야 한다.

특히 대책위는 일자리를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방기를 제기하며 정치 이슈화해야 한다. 이것이 대우조선 노동자들 자신의 단호한 저항과 맞물리면,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고 대우조선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9

**8월 22일(목)~25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